

# 자명종

공무원연금 2~3면

회의활동 4면

현장활동 5면

상급단체 소식 6면

칼럼 7면

종합 8면

## 존경하는 경북교육청노조 조합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경제혁신 및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뒤로 정부는 현정 이래 최악의 참사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던 시기에도 찌라시 언론들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흘려 여론을 살피는 짓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107만 공무원들의 고용주로서 그리고 국민 통합과 안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피고 용자인 공무원들을 관피아로 몰아세우고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마저도 없어야 할 적폐라고 분류하며 국민들과 공

무원사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간에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한 최일선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할 대상이란 말입니까?

▶ **공무원연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일뿐 경제혁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민간의 임금상승률에 한참을 못 미치는 보수의 경직성을 감안한 후불임금적 성격이며 공직자로서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의 불가, 영리 및 겸직활동의 금지, 형벌 및 징계에 의한 연금감액조

치 등 민간에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장기재직하며 오로지 국민에 대한 봉사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는 노후의 최소한의 생존권일 뿐입니다.

▶ **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고용 계약 위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재직자와 수급자 간 일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수급자의 수는 증가하지만 정원에 묶여 있는 재직자(기여금 납부자)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정부 부담률을 높이는 등 정부의 사전 대처가 마땅하나 우리정부는 대처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연기금재정을 편법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레기들의 엉터리 보도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과연 높은 수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기본적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서 보험료가 과세소득의 4.5%이며 납입최소기간이 10년 정도인 것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제약은 물론 보험료(기여금)는 7%, 납입기간은 물론 20년 이상이며 기본적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최대 민간의 39% 수준도 되지 않는 퇴직금이 녹아 합쳐져 있는 것이며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인사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습니다.

▶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면 공무원연금이든지 국민연금이든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급여수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노**

**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의 속성을 숨긴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여론몰이를 통해 하향평준화를 획책하고 더 나아가 공적연금을 무력화하여 재벌 보험사나 금융사의 개인연금에 노후를 맡기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가가 국민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노후의 삶을 시장경제에 내몰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슴한 구석이 먹먹해 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 **정부의 연금개악(改惡)책동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자 총 단결만이 힘입니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공무원연금개선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끝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악시도를 벌일 것입니다. 지난 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단체들이 총 집결하여 ‘연금사수’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였고 5월 29일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당사자인 공무원의 참여와 대국민지지 확보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 개악의 피해는 단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는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청원경찰 등으로 우리 경북교육청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직자와 퇴직자만의 문제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개악은 현재와 미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정부의 개악안에는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여 신규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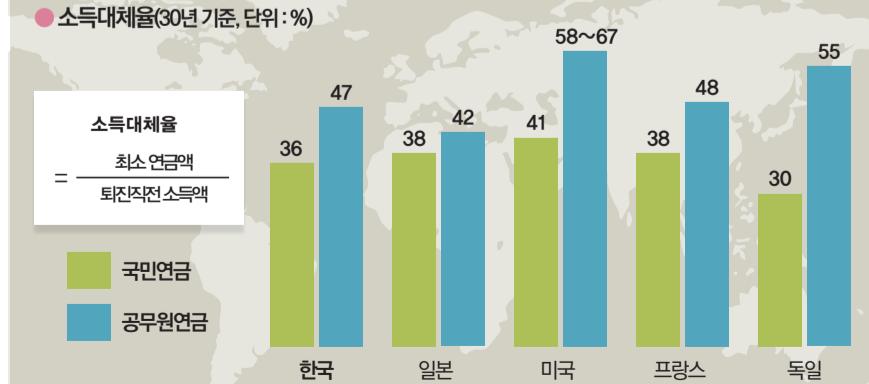
● 외국정부 대비 정부부담률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공무원부담률	7%	7.3%	6.1%	(없음)	6.1%
정부부담률	11%	23.8%	23.6%	52.5%	53.0%
GDP대비 정부부담률	0.5%	1%	2.1%	1.9%	3.4%

● 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미납

건명	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미납
'98 IMF 당시 구조조정(11만여명 감원)	퇴직일시금 4조 7,169억원 지급
2005년 철도청 공사화(3만9천명 퇴직)	퇴직일시금 2,277억여억원 지급
'83~'00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정부 부담금)	5,863억원
퇴직수당('92~'95 정부 부담금)	6,144억원
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총액	6조 1,453억원

● 소득대체율(30년 기준, 단위: %)



## ▶ 1면에 이어

국민연금 가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재직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여금을 부담하는 계층이 줄면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후배들이 공무원연금을 입대상이 아니라면 그들이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나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선배공직자들의 미래가 암울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투쟁에는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동참을 호소합니다.

정부의 연금 개악(改惡) 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개악 반대 투쟁도 반드시 희생이 수반될 것입니다. 거대하고 막강한 사용자인 정부와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 뿐인 우리 공무원노동자 가 힘을 겨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지지가 승리의 선결과제입니다.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광고를 통하는 학계와의 연대든 공무원 연금의 속성과 정부의 기만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알리고 정부가 부당 사용한 연금의 환수를 위한 법정소송

도 제기할 것입니다.

투쟁과정에서 희생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이들이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노동자 대동단결을 통한 투쟁기금 100억 조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107만 공무원들의 생존권 사수 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 투쟁에는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동

참을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교육노조도 지난 대의 원대회에서 기금설치에 관한 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저희 경북교육노조에 배정된 금액은 3억2천만원으로 상급단체에 가맹한 조합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조합원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직급별 차등 모금 조건표를 마련하여 후원 받고자 하니 누구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국민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알리고 정부가 부당 사용한 연금의 환수를 위한 법정소송

##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5월 29일(목) 오전 10:30 안전행정부 정문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공동의장인 조진호 위원장은 투쟁사

를 통해 “지금 현장 공무원노동자들은 AI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살쳐분 했고 지금 이시간에도 세월호 참사, 장성 토양원화재, 고양터미널 화재로 희생된 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빠른 사고수습과 유족분들을 위로하며 사고현장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입을 털어막아 놓고 진실을 왜곡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언론에 보도하는 등 공무원노동자와 국민을 함께 기만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악이 그것이다”고 호소했다. 또한

“더 이상 힘없고, 직급이 낮고, 빼 없고, 돈 없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노총 50여명을 비롯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출범 기자회견은 △공투본 구성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왜곡 보도와 일방적인 개악 시도를 저지 △

공무원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부당사용

기금에 대해 책임 질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기자회견 이후 공투본의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안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내에 진입을 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고 이후 안행부 후문에서 1시간여 동안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에 대한 집회와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후 해산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부당사용

●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 노조참여(투쟁) 효과

항목	1기 발전위(안) (2007.1)		2기 발전위(안) (2008.4)		발전위 최종안 노조참여 (2008.9)
	기준공무원	신규공무원	기준공무원	신규공무원	기준+신규
연금보수	과세소득		과세소득		기준소득 (과세소득, 성과급은 평균액)
보수상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전체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 수준
급여산식	재직기간 x 1.7%	재직기간 x 1.25%	재직기간 x 1.435%	재직기간 x 1.25%	재직기간 x 1.9%
비용부담률	5.24% ↓ 6.55%(08) ↓ 8.5%(18)	4.5% ↓ 6.45%(08)	5.525% ↓ 6.5%(08) ↓ 7.0%(11)	4.5%	5.525% ↓ 6.5%(09) ↓ 7.0%(12)
유족연금산식	70%	60%	60%		60% (신규자 적용)
연금지급액산정 기준기금: 300억원고정 납입기간: 33년 완납시	168만원	123만원	142만원	123만원	189만원

▶ 경북교육청 조합원 및 교육가족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원이든 아니든,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국민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권력유지와 정권

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가 무자르듯 이 손대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

면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2014년 7월 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올림



기금에 대해 책임 질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기자회견 이후 공투본의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안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내에 진입을 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고 이후 안행부 후문에서 1시간여 동안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에 대한 집회와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후 해산했다.

이날 공노총 50여명을 비롯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출범 기자회견은 △공투본 구성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왜곡 보도와 일방적인 개악 시도를 저지 △

공무원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부당사용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버스 투어 및 출근전 선전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및 본조, 지부임원들은 6월 19일(목) 오전 7:00 도청 및 도교육청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단위노조와 함께 『공무원연금 법 개악 저지』를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공무원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버스 투어 일정에 맞추어 경북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에 대한 출근선전전을 시행하였다.

오전 7시부터 본청 각과실에 직원 책상 위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본관 및 별관 출

입구, 경북도청 삼거리 등에서 공무원연금 법 개악 저지 홍보 리플렛을 조합원에게 전달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의 정당성을 알렸다.

당일 경북도교육청 본청 앞 출근선전에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

한 박홍기수석부위원장, 김태균부위원장, 장용복부위원장, 최연성지부장, 성수용지부장, 정원상사무총장 및 각국장, 본청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노총 연금홍보 버스투어로 윤주용 광역연맹위원장, 김형 대구시청노조위원장, 강창조 구미시청노조위원장, 정은향 기초연맹수석부위원장과 함께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마지막 생존의 끈이다. 이는 반드시

시지켜야 하고 지키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 희생은 노동조합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연금 개악”, “결사 저지” 구호를 외치고 해산하였다.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는 공노총 소속 연맹 및 단위노조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이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력 투쟁할 것이다.

### Q & A

### 궁금합니다!

1.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있으신데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판단하시는 사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내부에 일은 지난 3월에 경북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하는 것이 현안이지요. 단체교섭도 중요하지만 협약체결 후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재직자들의 특별휴가 조례 제정, 행정실장 보직화하는 조례 제정들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고, 1인 행정실장 해소, 행정실 직원 충원 문제, 병설유치원 문제(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병설유치원 전담인력으로 150명 증원) 등 모두가 현안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까지 개정하려고 합니다. 연금법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모두가 현안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까지 개정하려고 합니다. 연금법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조 이상이 됩니다. 이런 손실과 또 그동안 공무원들은 우리 대한민국발전을 위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노후에 밥은 먹고

로 1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연기금의 방만한 운영인데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97년 IMF 때 공무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 철도청의 공사로 전환시 연금 정산액 지급 등 약 6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환산 가치로 하면 약 18 조 이상이 됩니다. 이런 손실과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조의 반대가 예상되고 하니 정부에서도 선뜻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약 100만 명이고 연금수급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0만 명입니다. 이는 세 사람이 납부한 본인분담금과 정부분담금을 가지고 한 사람의 퇴직연금을 지급해주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본인부담금(평균 30만 원)을 내면 정부부담금(30만 원) 합쳐서 세 사람이 약 1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니 연금수급권자의 평균 수급액인 219만 원에 못 미치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 기준으로

김종기 위원장 주요 경력

- 경북교육청 청도교육청협회장
- 경북교육공무원노조 청도지부장
- 전국시도교육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1, 2대 사무총장
- 전국시·도 교육청 사무총장(교육연맹) 제4, 5대 위원장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초대 공동위원장
-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제4대 위원장
- 창원대학교-동아대학교 노동복지전공(석사)
- 2006경북교육청단체교섭 실무교섭대표
- 2006~2007 대정부단체교섭 실무교섭위원(노조측 간사)
- 2011년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위원
- 공무원직종개편 위원(소위원회 위원)



## 제2회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4.8 (화) 14:00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

세희 교수가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실 발전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였으며, 경북구미교육지원청의 송명화 주무관의 사회로 정승표(본 청감사관실) 백귀복(김천 감문중), 장병욱(구미 인의초), 천영선(울진 삼근초), 이정경(안동도립도서관)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오세희 교수는 "학교행정실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학교행정실 직원들과 교원과의 관계설정, 학교행정 실과 교육지원청과의 역할, 학교행정직원과 회계직원과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로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그동안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각급 학교행정 실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정례화되어야 하며,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함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학교 관련 정책 입안 중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부문들 대부분은 2013년도 단체협약에 담았으며 일부 명문화하지 못한 것들은 교섭과정을 통

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기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공무원들도 당당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스스로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해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부문들 대부분은 2013년도 단체협약에 담았으며 일부 명문화하지 못한 것들은 교섭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최대한 전달했으며 경북 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제53차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지난 4월 30일 군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상임위원회는 제27차 임시 대회(2014.4.8)에서 결정된 특별기금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 제정(안)승인을 위해서 개최되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더니 "4월을 보내기가 힘들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때 일수록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 노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참석해준 상임위원회들에게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교육노조 「특별기금 운영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향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결과에 따라 경북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의 결의대로 "공무원연금법 반대 100억 투쟁기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별기금은 1인당 100,000원으로 각 지역에서 조합원 및 후원회원, 비가입자 등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제2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11시부터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옆(한흥냉면가족식당)에서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고 열악한 환경에서 참석해준 대의원들께 감사하고 오늘의 이 어려움이 공무원노조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과, 조합원 5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이어서 주요활동사항 보고와 201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연금개악저지 기금설치 승인(안),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승인(안)이 원안대로의 의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연금개악저지 기금설치 승인(안)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상급단체

## 민간유사경력 학교회계직 (구 육성회직)

### 임시직 경력 호봉 100% 인정 하기로 !!

구분	주요내용	
현황	정부가 '민·관 호봉경력 차별 부분 개선을 통한 보수체계 합리화'를 취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경력인정비율을 확대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임시직경력,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경력은 인정범위를 차등해서 적용	
문제점	임용전의 동일경력을 임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부당하게 차등적용 (초·중고 육성회 근무경력 인정기준)	민간경력 인정범위
	인정기준 동일분야: 임시직 경력, 구육성회직원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경력경쟁률을 제한) 비동일분야: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선결과	임용(채용) 형태에 관계없이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호봉 100% 인정 ※ 모든 특별채용 대상자 해당	



## 그린스쿨 선도단 지원 활동 전개

###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

경주지부(지부장 전삼용)은 2014.7.2. (수) 경주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구, 오릉초) 및 강동초 단구분교에서 그린스쿨 선도단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지원 활동은 그린스쿨 선도단 40명이 참석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하지 못했던 수목 정지 및 운동장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린스쿨 선도단은 2010년 처음 발족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린스쿨 선도단이 있어 경주지역 교육기관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기대하였다.



### 그린스쿨 선도단을 소개합니다.

'그린스쿨 선도단' 들어보셨나요? 경주시 외곽지역 초·중학교 40개교 40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모임이며, 각자 작은 인력이지만,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동·서·남·북부 지역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스쿨 선도단'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요? 각 학교마다 하기 어려운 수목전지, 잔디 관리, 수목 병충해 방제, 배수로 및 멘홀 청소, 폐지학교 관리를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만 있는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린스쿨 선도단' 여러분!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학교행정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개최”

교육청노조가 학교행정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교육청 노조는 2014년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3일 노조회의실에서 “학교행정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한 업무분장 직무분석연구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정책연구에 앞서 현장의 요구

구 반영 필요성에 따라 향후 연구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단위노조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비효율적인 인적 관리, 행정실-교원 간 이원화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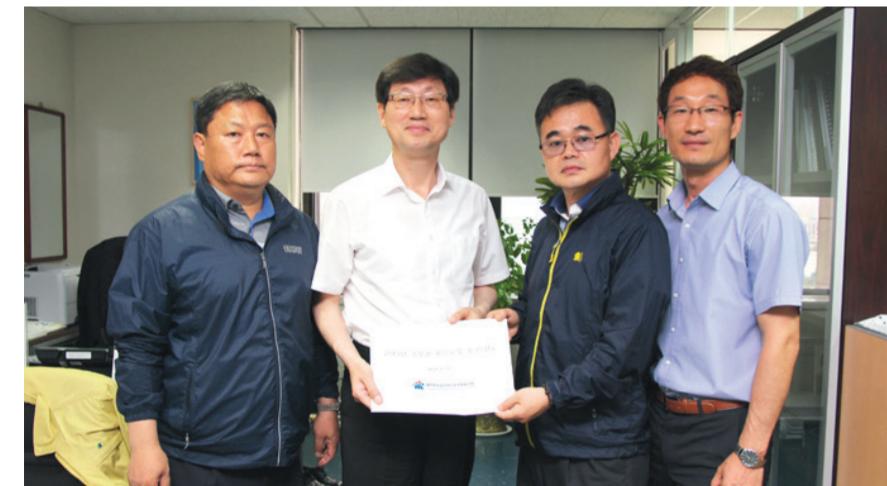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안행부제출

공노총은 6월 3일(화)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 안전행정부가 2014. 5. 29.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안전행정부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

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의 소관 업무로 이관하고(개정안 제22조의3 신설),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정부교섭대표를 ‘안전행정부장’ 관리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노총, 보수교섭요구(안) 정부 전달



공노총 보수교섭위원회(위원장 김상운)는 6월 23일(월) 안전행정부에 2015년 공무원보수교섭 요구(안)를 전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서를 전달했으며, △2015년 보수인상요구안 △각종 수당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공공부문 일선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책대안’ 토론회

공노총이 6월 24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일선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



장의 사회로 △해양사고 예방 대책 현장 의견(고진호 해수부노조 위원장) △집원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활동 추진 계획(김정기 우정노조 산안본부장) △소방의 현장 대응과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고진영 전북군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김홍준 대전남부소방서 지방소방위) △원전 안전 관련 사례(김관필 영광군노조 위원장) △재난재해[가축전염병] 동원 근절대책(장현우 공노총 기획정책본부장)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생 안전교육의 실

이 발제했다. 향후, 공노총은 금일 토론회 내용을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토론회를 마련하여 심도 깊은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청 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인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갔다가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막걸리를 마시러 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후줄그레한 전통시장의 한 모퉁이, 그야말로 ‘백열등이 그네를 탈 듯한’ 허름한 술집에서 둘러앉았다. 옛 인연들의 만남이었다. 이야기는 중구난방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귀가 번쩍이었다. 어느 선생님의 말 한 토막 때문이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힘을 합쳐야죠.”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제가 뭔 잘못이라도…?”

“아니, 그냥 확인 차여쭤 봤습니다.”

역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는 언명이었다.

“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의 주체가 아닌가요? 학교의 비정규직은 어디 갔나요? 그들이 없어도 교육은 이뤄지나요?”

“….”

전교조의 ‘참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 나아가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것쯤은 내남없이 알고 있다. 적어도 칠판 밑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받아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정식 명칭이 ‘전국교원노조’가 아니라 ‘전국교직원노조’라는 것은 허무개그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밝힌 창립선언문의 맨 앞 구절이다. 분명히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라고 못박고 있다. 비록 현행법으로

교원노조는 교원만 가입하고 교육청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그리고 비정규직들은 일반 노조에 가입하지만 ‘교직원’ 노조라는 명칭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교육청 공무원도 교육의 주체라는 말을 하려고 먼 길을 돌아왔다.

여기서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 교육청 공무원은 스스로를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개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 과제에 매달리다 보니….”

한 치 건너 두 치라는 얘기였다. 그럼 조합원은 공무원노조가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거기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수나 승진, 연금 같은 게 주된 관심사고….”

위원장의 말이 거듭 중동무이된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하기보다는 같은 사용자를 앞에 두고 ‘한지봉 세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건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 참에서 노동조합, 특히 공무원 노조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사용자)와 교섭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 이 때 만일 국민이 공무원을 ‘절밥통’으로 보고 공무원노조를 ‘절밥통에 금메기’ 하려는 집단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부로서는 ‘국민이 싫어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경제적 실리에 매달려왔으면서도 실리조차 대로 쟁기지 못했다… 고나는 생각 한다. ‘실속없는 실리주의’를 추구하면서 욕만 얻

어먹은 셈이다. 가령 정부를 상대로 하는 보수교

섭은 그것이 노조의 법적 권한인데도 여전히 꿩 구워 먹은 자리인가하면 이제는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양꼬없는 전빵’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대리인이다. 국민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 ‘값싸고 질 좋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을려댄다. 교육청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교육서비스다. 국민들은 교육청 노조에 대해서도 망가진 교육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실리엔 불을 켜면서도 본연의 공공서비스는 외면하는 공무원노조를 국민들이 지지할리는 만무하다. 실리도 공공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짧은 글에 긴 말을 담는 건 예의가 아니다. 결론을 말하면 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의 주체고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교원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는 교육청 공무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학교의 잡일꾼도, 교육지원인력도 아닌 교육의 당당한 주체라는 자존심. 그렇다면 이는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육관련 노조, 즉 교원노조나 비정규직 노조, 나아가 학부모단체와 연대하는 일은 필수다. 공무원노조가 공공서비스의 질의 개선에 나서는 걸 거창하게 ‘공공서비스 노조주의’(public service unionism)라고 부른다. 지금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공무원노총 정책자문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주요 경력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 위원장
-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T/F팀장(비서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대자동차 노사자문위원회 대표
- 한국GM 노사자문 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공저, 연구책임자, 한국노동교육원, 2006)
- “현대자동차의 세제화전략과 노동조합의 저항적 실리주의”, 「산업노동연구」, 제15권 1호(2009)
-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시사점”, 「동향과 전망」, 제76권(2009, 여름호)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재생전략의 과제”, 「현대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10)
-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생활과 과제”, 「산업노동연구」, (2009)
-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밸анс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2011)

동행(同行)

## 애달픈 봄날은 간다

**꽃피는** 봄, 꽂지는 봄. 봄은 그 렇게 왔다가 갑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한 것이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아픔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국가든 사회든 그리고 조직이든 구성원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각자 맡은바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도자는 구성원을 지켜내어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약속과 신뢰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진도 앞바다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탄해 하였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선박법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

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법률이 구속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선장의 막강한 권한에 비춰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할 것인데 세월호의 지도자인 선장은 그려질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생때같은 아까운 청춘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세월호 선장이나 일부 선원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탈출해서가 아니라, 탈출 전에 그들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탓입니다. 이 땅을 지키고 가꿔온 선열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왜 본받지 못했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안타깝고 한스럽고 애통합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게 할 뿐이며, 백성의

칭송을 받는 지도자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그 다음이며 최악의 지도자는 백성의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켜야 할 기본을 무시하거나 무책임으로 인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사후악방문식이고 쉽게 잊혀집니다. 냄비가 이제는 무쇠로 바뀔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냄비를 들고 다녀야 하는지 후진적인 사고에서 탈피해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청춘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을 안고 봄날은 애달프게 지나갑니다.



1543년 중종때, 김인후는 세자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세자는 그의 학식과 임품에 반해 손수 그린 목죽도를 하사하였습니다. 세자가 즉위하자마자 돌아가시자 김인후 선생은 벼슬을 떠나 필암서원을 세우고 인종의 목죽도를 모시며 후학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인종을 그리며 인종의 묘를 찾은 선생의 절의는 청빈한 삶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 알고 마시자!

물이 가진 7가지 덕

## 1. 일어나자마자 2잔의 물

-몸체내의 기관들이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준다.

## 2. 식사하기 30분 전에 1잔의 물

-소화를 촉진 시켜준다.

## 3. 목욕하기 전에 1잔의 물

-혈압을 내려준다.

## 4. 잠자리 들기 전에 1잔의 물

-뇌졸증이나 심장마비를 방지한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면 그릇에도 담기는 '용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자명종'에서는 조합원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글을 cjy2658@gyo6.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한\_수시접수

분량\_200자 원고지 10매이하  
또는 A4 2장 자유분량

장르\_시, 수필, 칼럼, 논평등 제한없음

※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과 필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